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6

연금이슈



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

동향분석



제120호 2026. 06. 30.

AI 확산에 따른 세대 간
고용·실업 전이 분석의 필요성

백운 부연구위원

글로벌 스튜어드십 코드의 패러다임 전환

최서연 부연구위원

contents

I. AI 확산에 따른 세대 간 고용·실업 전이 분석의 필요성	3
1. 들어가며	3
2. AI 확산과 세대별 고용 변화 논의	4
3. 전이율 분석의 필요성	5
4. 전이율 분석을 위한 노동시장 상태 구분	7
5. AI 노출도와 전이율 지표의 결합 방향	8
6. 국민연금 행정자료 기반 전이율 지표의 활용 가능성	11
7. 나가며	12
II. 글로벌 스튜어드십 코드의 패러다임 전환	13
1. 머리말	13
2. 스튜어드십 코드의 글로벌 스탠다드 동향	14
3.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24
4. 맺음말	27

AI 확산에 따른 세대 간 고용·실업 전이 분석의 필요성



백운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노동시장 전반의 업무수행 방식과 인력수요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AI는 단순 반복업무뿐 아니라 문서작성, 자료분석, 코딩, 고객응대 등 비교적 인지적·비반복적 업무에도 적용되면서 기존의 자동화 충격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AI의 영향은 전체 고용 규모에 일률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연령, 숙련수준, 산업, 직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고용 감소 여부를 넘어 세대 간 노동시장 기회의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직무 경험과 숙련을 축적해야 하나, AI가 초급 직무 또는 보조적 업무를 대체할 경우 안정적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로가 약화될 수 있음
- 반면 중장년층은 기존 직무경험과 조직 내 지위를 바탕으로 AI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AI 확산이 세대 간 고용기회와 소득형성 경로의 차이를 확대할 수 있음
- 이는 국민연금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임. 청년층의 고용진입 지연, 실업 반복, 비경제활동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초기 가입이력 형성과 보험료 납부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임

■ 본고는 AI 확산이 세대별 고용·실업 경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률·실업률 등 저량 지표를 보완하는 전이율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검토함

- 특히 AI 충격이 특정 시점의 고용 규모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상태 유지, 실업 진입, 재취업, 비경제활동 이탈 등 노동시장 상태 간 이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이러한 접근은 향후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결합하여, AI 확산이 단기 고용불안뿐 아니라 장기 가입기간 형성과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음

2 AI 확산과 세대별 고용 변화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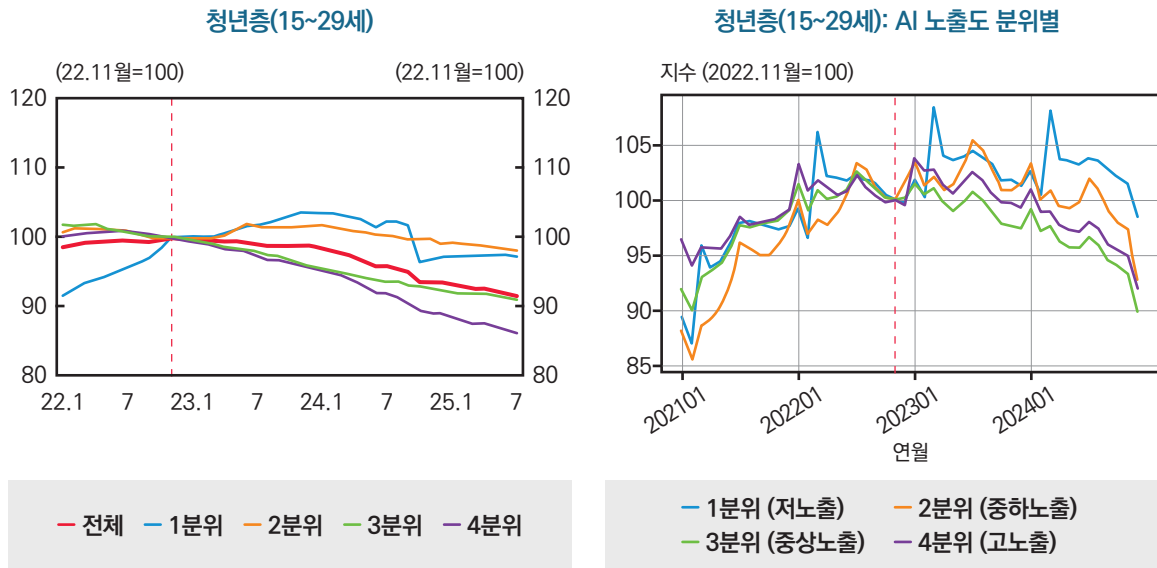
■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는 AI 확산의 영향이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 등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는 많이 감소했지만, 50대 일자리는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AI 확산 초기 단계에서 기존 직무경험과 조직 내 숙련을 보유한 중장년층이 AI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청년층은 초급 직무 축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 해외 연구에서도 생성형 AI에 많이 노출된 직종에서 초기 경력 노동자의 고용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경력 노동자나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의 고용은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음

■ 국내 자료를 활용한 최근 분석에서도 AI 고노출 업종 또는 직종에서 청년고용 감소가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진수·오삼일(2025)은 2022년 11월 ChatGPT 출시 이후 AI 고노출 업종에서 청년고용 감소가 집중되었음을 국민연금 가입자수 자료를 통해 제시함
- 장지연(2026)은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생성형 AI 확산 전후 AI 고노출 직종에서 청년 고용 감소세를 확인함
- 이러한 논의는 AI 확산이 단순한 총고용 변화가 아니라, 세대별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가능성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

<표 1> 청년층 AI 노출도 분위별 취업자



자료: 한진수 · 오삼일(2025).

자료: 장지연(2026).

■ <표 1>은 AI 확산이 청년층 고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고용 감소 경로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취업자 수, 가입자 수, 고용률 등은 AI 고노출 집단에서 청년고용이 감소했는지 보여주는 데 유용함
-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 취업자의 이탈 때문인지, 신규 진입 둔화 때문인지, 실업 이후 재취업 악화 때문인지,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 때문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움
- 따라서 AI 확산에 따른 세대 간 노동시장 불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 규모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상태 간 이동경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전이율 분석의 필요성

■ 통상 실업률,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는 특정 시점의 노동시장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장(stock) 지표임

- 이러한 지표는 노동시장 전체의 규모와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함
- 그러나, 특정 집단이 어떤 경로로 실업에 진입하고 실업에서 벗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표 2> 저량 지표와 전이율 지표의 차이

구분	저량 지표	전이율 지표
주요 지표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비경제활동인구	고용 → 실업, 실업 → 고용, 실업 → 비경제활동 등 상태 간 이동확률
내 용	특정 시점의 노동시장 상태와 규모	일정 기간 동안의 진입, 이탈, 복귀 경로
장 점	직관적이고 비교가 쉬움	변화의 원인과 경로를 구분할 수 있음
한 계	고용 감소 또는 실업 증가의 원인을 식별하기 어려움	개인 또는 집단의 상태 변화 자료가 필요함
쓰 임 새	AI 고노출 집단의 고용 감소 여부 확인	AI 충격이 고용상실, 재취업 악화, 노동시장 이탈 중 어떤 경로로 나타나는지 확인

■ 같은 실업률이라도 그 이면의 노동시장 동학은 서로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용에서 실업으로의 유입이 크고 재취업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노동시장과 실업 유입은 적지만 한 번 실업에 진입하면 장기간 머무는 노동시장은 수치상으로 같은 실업률을 보일 수 있으나 정책적 의미는 전혀 다름
- 또한, 공식 실업률이 낮아질 때도, 원인이 취업으로의 복귀 증가 때문인지 구직활동 중단이나 비경제활동 이탈 때문인지에 따라 정책적 의미가 상반되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AI 충격을 분석할 때에는 “몇 명이 실업 상태에 있는가”뿐 아니라 “누가 실업으로 들어 오고, 누가 취업으로 돌아가며, 누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식 실업 개념은 노동시장 미활용을 과소 포착할 가능성이 있음

- 공식 실업은 일반적으로 구직활동 여부와 취업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최근 까지 노동시장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수 있음
- 이 경우 청년층 또는 AI 고노출 직종에서 공식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거나 구직을 중단하는 숨은 이탈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 행정자료에서의 가입 이력, 고용 신호, 실업 관련 행정 신호 등을 활용하여 공식 실업이 포착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미활용 상태를 보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4

전이율 분석을 위한 노동시장 상태 구분

■ 국민연금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이율 분석을 위해서는 관측 가능한 신호에 기반한 노동시장 상태 구분이 필요함

- 공식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통계상 정의에는 구직의사, 구직활동 여부, 취업 가능성 등 국민연금 행정자료만으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공식 실업률이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상태 구분을 그대로 대체하기보다, 행정자료에서 관측 가능한 고용 신호, 실업 관련 신호, 최근 고용이력 등을 기준으로 노동시장 상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 상태를 고용, 행정적 실업, 노동시장 부착형 비참가, 비부착형 비참가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함(〈표 3〉)

<표 3> 노동시장 상태 구분과 행정자료상 식별 기준

상태	개념적 의미	해석상 유의점
고 용	국민연금 행정자료상 고용 또는 소득활동 신호가 확인되는 상태	노동시간 부족, 불완전취업, 구직 중 취업 등 세부 상태까지 구분하는 개념은 아님
행 정 적 실 업	직전 기간 고용상태였으나 현재 고용신호가 없고, 실업 관련 행정신호가 확인되는 상태	공식 실업률 또는 ILO 기준 실업과는 다름. 구직 의사와 즉시 취업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자료상 관측 가능한 실업 관련 신호에 기반한 간접적 대리 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노동시장 부 착 형 비 참 가	현재 고용상태나 행정적 실업상태는 아니지만, 최근 일정 기간 내 고용 이력이 확인되는 비취업 상태	가까운 시점에 고용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비취업 상태로 해석 가능
비부착형 비 참 가	행정자료상 고용 및 실업 관련 신호가 약한 장기적 비취업 상태	공식 비경제활동인구 전체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며, 행정자료상 최근 고용이력과 실업 관련 신호가 약한 잔여적 비취업 상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는 공식 실업률을 대체하기 위한 분류가 아니라, 국민연금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노동 시장 미활용과 부차 약화를 보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 틀이므로 해석상 유의가 필요함

■ 이러한 상태 구분은 비취업 상태 내부의 이질성과 노동시장 부차 정도를 보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가 됨

- 행정적 실업과 노동시장 부차형 비참가는 공식 실업률 개념과는 다르지만, 최근 고용 이력 또는 실업 관련 신호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과의 연결성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두 상태를 함께 살펴보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대안적 확장 실업 지표를 구축 가능.
- 반면 비부차형 비참가는 행정자료상 노동시장과의 연결성이 약한 상태로,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범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향후 고용상태에서 비취업 상태로의 이동, 비취업 상태에서 고용으로의 복귀, 노동시장 부차 약화 가능성 등을 전이율 지표로 살펴볼 수 있음

5 AI 노출도와 전이율 지표의 결합 방향

■ 노동시장 상태를 구분한 뒤에는 각 상태 간 이동을 전이율 지표로 산출할 수 있음

- 전이율은 특정 시점에 한 노동시장 상태에 있던 사람이 다음 시점에 다른 상태로 이동할 확률을 의미함
- 예를 들어 고용상태에서 행정적 실업 또는 노동시장 부차형 비참가로 이동하는 비율은 고용 상실 또는 비취업 전환 위험을 보여줄 수 있음
- 반대로 행정적 실업 또는 노동시장 부차형 비참가에서 고용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비취업 이후 고용복귀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 가능
- 다만 행정자료 기반 상태 간 이동은 구직의사나 구직단념 여부를 직접 관측한 결과가 아니므로, 공식 실업 통계상의 실업·비경제활동 전환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보다는 노동시장 부차 정도의 변화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4> 핵심 전이율과 해석 방향

전이 경로	의미	해석 방향
고용 → 행정적 실업	고용상태에서 실업 관련 행정신호가 있는 비취업 상태로의 이동	공식 실업률의 증가와 유사한 방향
행정적 실업 → 노동시장 부착형 비참가	행정적 실업 상태에서 실업 관련 행정신호가 종료되었으나, 최근 고용이력에 따른 노동시장 부착은 남아 있는 비취업 상태로의 이동	공식 실업으로 포착되지 않을 수 있는 비취업 전환 흐름을 보완적으로 확인
행정적 실업 → 고용	행정적 실업 상태에서 고용상태로의 이동	비취업자의 고용복귀 경로가 집단별로 달라지는지 확인
노동시장 부착형 비참가 → 고용	부착형 비취업 상태에서 고용상태로의 이동	단기간 내 고용 이력이 있던 비취업자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흐름을 확인
노동시장 부착형 비참가 → 비부착형 비참가	최근 고용이력에 기반한 노동시장 부착이 약한 상태로의 이동	비취업 상태가 장기화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보조적으로 확인
비부착형 비참가 → 고용	비부착형 비취업 상태에서 고용상태로의 이동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고용으로 재진입하는 흐름을 확인

■ AI 노출도는 전이율 지표를 AI 영향 가능성과 결합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AI 노출도는 직업 또는 업무 단위에서 AI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Eloundou et al.(2023)은 O*NET의 직업별 세부 업무를 기준으로 LLM의 업무시간 단축 가능성을 평가하여 직업별 노출도를 산출함
- Felten et al.(2023)은 직업별 요구능력과 언어모델의 기능적 관련성을 연결하여 직업·산업·지역별 언어모델 노출도를 구성함
- 이러한 지표는 AI 고노출 집단과 저노출 집단의 고용이탈, 고용복귀, 노동시장 부착 약화 가능성을 전이율 관점에서 비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직업코드가 없는 행정자료에서는 산업별 직업구성비를 활용해 산업 단위 AI 노출도를 구성할 수 있음**

- AI 노출도는 원칙적으로 직업 또는 업무 단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민연금 행정 자료에 개인별 직업코드가 없어 직업별 AI 노출도를 개인에게 직접 부여하기 어려움
- 이 경우 외부 노동시장 통계의 산업별 직업분포를 활용할 수 있음. 이는 산업 내 직업구성비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직업별 AI 노출도를 산업별 AI 노출도로 변환하는 방식임

<표 5> 직업별 AI 노출도의 산업 단위 변환 및 행정자료 결합 방식

단계	주요 내용	분석상 의미
1단계	직업별 AI 노출도 확보	직업 또는 업무 단위에서 AI 영향 가능성 측정
2단계	외부 노동시장 통계에서 산업×직업 고용분포 산출	각 산업 안에 어떤 직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3단계	직업별 AI 노출도를 바탕으로 산업 내 직업 비중으로 가중평균	산업별 AI 노출도 구성
4단계	산업별 AI 노출도를 국민연금 행정자료의 산업코드와 결합	행정자료 내 개인에 산업코드를 기준으로 산업 수준 AI 노출도 부여
5단계	AI 노출도 분위별 집단 구분	고노출·중노출·저노출 산업 구분
6단계	집단별 노동시장 전이율 비교	AI 노출도에 따른 고용이탈·고용복귀·부착 약화 가능성 점검

■ **산업 단위 AI 노출도를 행정 자료상의 집단 구분과 결합하면 노출도별 전이율 지표를 산출할 수 있음**

- 국민연금 행정자료의 산업코드에 산업별 AI 노출도를 결합하면, AI 고노출·중노출·저노출 산업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노동시장 전이율을 비교할 수 있음
- 여기에 연령, 성별, 지역 정보를 결합하면 AI 노출도별 전이율을 세대·성별·지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이는 개인별 직무 노출도가 아니라 산업 내 평균적 직업구성에 기반한 보조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6

국민연금 행정자료 기반 전이율 지표의 활용 가능성

■ 국민연금 행정자료는 AI 노출도별 전이율 지표를 장기적으로 구축하고, 그 변화가 가입이력에 누적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전이율 분석은 특정 시점의 고용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개인 또는 집단이 시간에 따라 어떤 상태로 이동하는지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접근임
- 국민연금 행정자료는 가입상태, 자격 변동, 사업장 이력, 보험료 납부이력 등을 장기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상태 변화와 가입이력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데 장점이 있음
- 또한, AI 고노출 집단에서 고용이탈 위험이 높아지거나 고용복귀가 지연되는 경우, 이러한 변화가 단기 고용불안에 그치는지 또는 초기 가입이력 형성 지연, 가입공백, 납부이력 단절로 이어지는지 추세를 함께 점검할 수 있음

<표 6> 국민연금 행정자료 기반 전이율 지표의 활용 가능성

활용 영역	전이율 지표의 의미	국민연금 관점의 활용 가능성
고용이탈 위험 점검	고용 → 행정적 실업 또는 부채형 비참가 전이	특정 세대·산업·지역에서 비고용 전환 위험이 커지는지 점검
고용복귀 가능성 점검	행정적 실업 또는 부채형 비참가 → 고용 전이	비취업 이후 고용복귀가 지연되는 집단을 파악
노동시장 부차 약화 점검	부채형 → 비부채형 전이	노동시장 연결성이 약화되는지 확인
세대 간 불균형 점검	연령집단별 전이율 격차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이탈·복귀 경로 차이를 비교
AI 노출도별 취약성 점검	AI 고노출·저노출 집단 간 전이율 차이	AI 충격이 특정 직무·산업·세대에 집중되는지 확인
가입이력 위험 모니터링	전이율과 가입·납부 이력의 결합	고용불안이 초기 가입 이력 형성 지연, 가입 공백, 납부 이력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검

■ 이러한 지표는 향후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 노동시장 변화 모니터링에도 활용될 수 있음

- AI 고노출 청년층에서 고용이탈 전이율이 높아진다면 초기 가입 이력 형성의 불안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비취업 상태에서 고용으로 복귀하는 전이율이 낮아진다면 가입이력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음
- 노동시장 부착형에서 비부착형으로의 이동이 확대된다면 공식 실업률에는 드러나지 않는 노동시장 부착 약화와 가입 공백 장기화 가능성을 보조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지표는 직접적인 인과효과를 보여주는 결괏값은 아니며,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국민연금 가입 이력 위험을 추적하기 위한 진단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7

나가며

■ AI 확산에 따른 고용·실업 문제는 특정 시점의 고용 규모 변화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 AI 충격은 세대별 노동시장 진입, 고용이탈, 고용복귀, 비취업 지속 경로를 다르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저량 지표와 함께 고용, 행정적 실업, 노동시장 부착형 비참가, 비부착형 비참가 간 전이율을 살펴보고, 노동시장 이동 경로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AI 노출도와 국민연금 행정자료를 결합한 전이율 지표는 세대별 노동시장 이동경로와 가입이력 위험을 함께 점검하는 보완적 지표체계로 활용될 수 있음

- AI 노출도는 전이율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AI 고노출 집단과 저노출 집단의 고용이탈, 고용복귀, 노동시장 부착 약화 가능성을 비교하는 데 유용함
- 전이율 분석은 AI 시대의 실업 문제를 실업 상태 논의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고용에서 이탈하고, 누가 다시 고용으로 복귀하며, 그 과정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어떻게 누적되는가”로 확장하고자 하는 접근임

글로벌 스투어드십 코드의 패러다임 전환



최서연
부연구위원

1

머리말

- 2010년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가 세계 최초로 스투어드십 코드(The UK Stewardship Code)를 제정한 이후, OECD가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수용 및 전세계에 권고하면서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
 - ICGN(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은 2016년 글로벌 스투어드십 원칙(ICGN Global Stewardship Principles)을 제정하여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실무 지침을 제시하고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의 참여와 이행을 주도
 - 한국은 2016년 12월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하였으며,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코드 참여로 국내 자본시장에 확산
- 최근 스투어드십 코드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규제 강화에서 탈피, 코드의 내실화 및 간소화, 적용의 유연화로 패러다임 전환
 - 주요국은 글로벌 개정 코드 본격 시행
 - (영국 FRC) 투자자의 보고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실질적 성과 개선을 강조하는 「The UK Stewardship Code 2026」를 2026년 시행
 - (일본 FSA) 투명성 제고 및 협력적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해 코드 개정, 「Japan's Stewardship Code (2024)」를 2026년 시행
 - (한국 금융위원회) 스투어드십 코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코드 개정 추진 중
- 이에 본고는 주요 글로벌 기관들의 최신 스투어드십 코드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스튜어드십 코드의 글로벌 스탠다드 동향

■ OECD (국제협력개발기구)

- 1999년 자본시장 건전성을 위해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제정, 글로벌 지배구조 표준인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수립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과 주주관여(stewardship) 지침을 명시하여 글로벌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의 가이드라인 제공
 - 2025년~2026년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및 「Shareholder Engagement and Stewardship」 보고서를 발간
 - 전 세계 1/3 이상 국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 및 실효성 점검 체계 모니터링 중
- 2023년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개정
 - 자본시장 내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회복탄력성을 지원하는 기업지배구조 정책 장려
 - III. Institutional investors, stock markets, and other intermediaries 개정
 - 코드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관투자자는 자산 소유자(asset owners)와 최종 수익자의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최종적인 스튜어드십 책임은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규정
 -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의결권 행사 정책(voting policy) 및 행사 내역, 그리고 의결권 자문사 등과의 이해 상충(conflicts of interest) 관리 방안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권고

<스튜어드십 코드 수립의 7대 원칙>

A.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및 정책 공시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및 의결권 정책을 공시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주주 관여를 장려함

B. 실제 소유자의 의사 존중

의결권은 수탁기관이 아닌 주식의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지시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예탁증서(DR) 보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 보장

C. 이해상충 관리 및 공시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상충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D. 자문 서비스 및 전문가의 무결성

의결권 자문사, ESG 등급 제공기관 등은 이해상충을 공개하고, 평가 방법론을 투명하게 유지하여 분석의 무결성을 확보해야 함

E. 시장 불법행위 엄금

자본시장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시행해야 함

F. 교차상장 시 적용 법규의 명확화

본점 소재국 외에 상장된 경우,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어느 국가의 지배구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공시해야 함

G.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격 발견

주식시장은 투자자가 기업 성과를 적절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지배구조 강화에 기여함

출처: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VI.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신설

-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장(chapter) 추가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지침 강화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신설 배경>

핵심요인	세부내용	기대효과
투자자 기대 변화	- 기후변화 등 ESG 이슈가 재무적 위험 및 기회로 인식 - 회복탄력성 및 관리 능력이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로 부각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글로벌 환경 변화	- 파리 협정 및 SDGs에 따른 넷제로/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전체 경제의 안정성으로 연결	글로벌 표준 정립
경제 전반의 회복탄력성	-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전체 경제의 안정성으로 연결 - 건전한 지배구조를 통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 및 장기 성장 도모	경제 시스템의 안정

■ UN PRI

- UN PRI는 6대 원칙 중 제2원칙(active ownersh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스투어드십의 가이드라인 제시
 - 제2원칙에서 적극적 주주권(active ownership) 행사를 명시

<UN PRI: Stewardship Guideline>

Principle 1: Incorporation

“We wil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우리는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ESG 이슈를 통합할 것이다.)

Principle 2: Active ownership

“We will be active owners and incorporate ESG issues into our 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
(우리는 적극적인 주주가 될 것이며, 주주권 행사 정책 및 실무에 ESG 이슈를 통합할 것이다.)

Principle 3: Disclosure

“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우리는 투자 대상 기업에 ESG 이슈에 대한 적절한 정보 공시를 요구할 것이다.)

Principle 4: Promotion

“We will promot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within the investment industry.”
(우리는 투자 업계 내에서 본 원칙들의 수용과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Principle 5: Collaboration

“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우리는 본 원칙들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다.)

Principle 6: Reporting

“We will each report on our activities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Principles.”
(우리는 본 원칙들의 이행 활동과 성과에 대해 각자 보고할 것이다.)

출처: public.unpri.org

- Active Ownership 1.0 체계에서 Active Ownership 2.0 체계로 전환
 - 2022년 Active Ownership 2.0의 가이드라인 및 프레임워크 공표
 - 시스템 위기에 대응하며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성 측정 및 추구
 - PRI 공동 참여 플랫폼(PRI Collaboration Platform) 등을 활용하여 투자자 간 연대 및 다자간 협력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

<UN PRI의 Active Ownership 2.0>

Three central elements

Outcomes, not inputs or processes

focusing on the outcomes seen in the real world,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assessing which processes investees/issuers have in place.

Common goals

focusing on outcomes that benefit economies and societies as a whole, rather than on the relative performance of one investee/issuer over another.

Collaborative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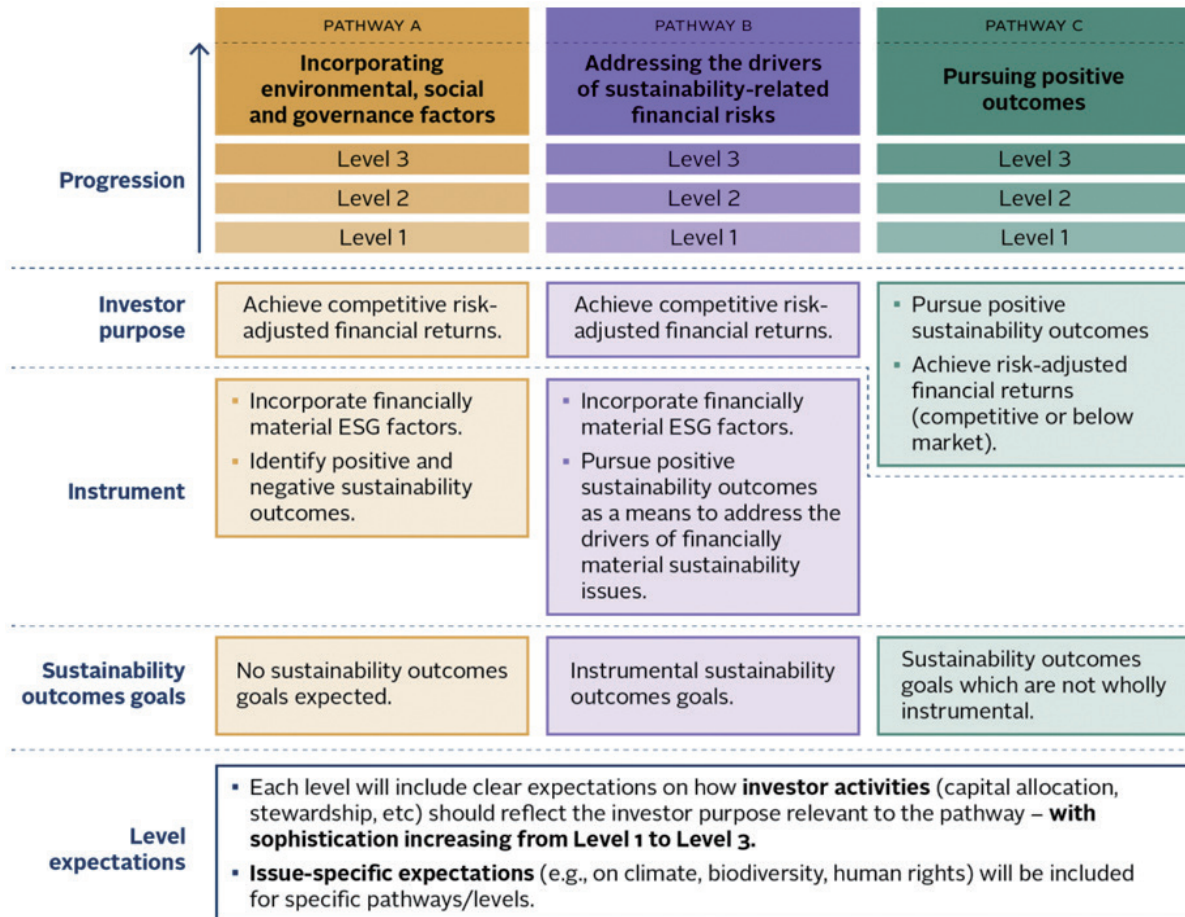
collaborating with other investors and service providers to address these collective goals and deliver real-world outcomes.

출처: public.unpri.org

- 보고 체계 대폭 간소화와 Progression Pathways 도입
 - 2023년 Progression Pathways 제안 및 설계
 - (2023년 설계안) 투자자의 목적에 기반한 투자 경로 설정 및 지속가능성 이슈에 기반한 경로 설정
 - 2024년 Concept 1(투자자 목적 기반)의 Pathways 구조로 확정
 - 2027년부터 Progression 보고 체계 단계적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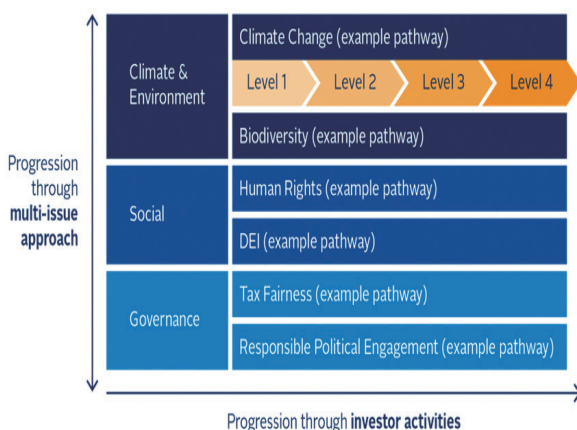
<2023년 Progression Pathways (안)>

Concept 1: Investor purpose-based progression model in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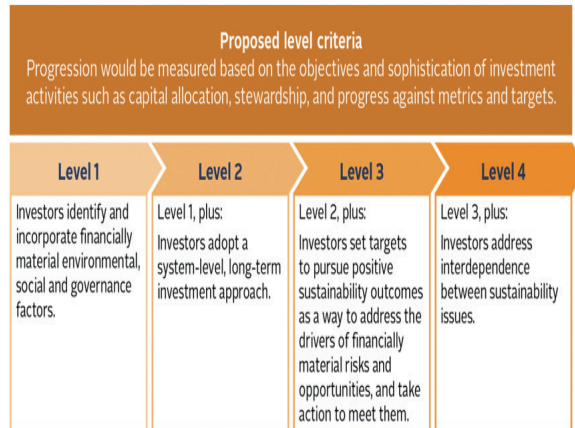


Concept 2: Issue specific

Illustration of progression within this model



Proposed definition of levels within this model



출처: UNPRI(2023), Progression Pathways

■ ICGN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스튜어드십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 2016년 「Global Stewardship Principles」 제정, 다국적 투자자에게 글로벌 표준 제시
 - 2020년 개정, ESG 통합(수탁자 책임과 ESG의 연계) 및 장기 가치 창출 원칙을 강화
 - 2022년 개정, 6장(part)으로 재편, 적극적 주주 관여 활동,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 강조
- ICGN와 GISD (Global Inves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공동으로 「ICGN-GISD Model Mandate 2022」 개발
 -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성 규범(soft law)에서 투자일임계약서(Investment Management Agreement, IMA)를 활용하여 경성규범(hard law)화
 - (Part 4. Alignment) 자산소유자의 책임투자 지침 수용 및 기후변화·시장위험 등 거시적,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s)의 투자 프로세스 통합
 - (Part 5. Stewardship) 자산운용사의 실질적 기업 관여 구체적 제시(collective engagement),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
 - (Part 6. Accountability)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 체계 구축, 위험관리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 확립,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설명책임 강화

■ 영국 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

- 2010년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초 도입, 세 차례에 걸쳐 코드 개정 및 보완
 - 2012년 9월 1차 개정(7개 원칙 유지)
 - 2019년 10월 2차 개정(12개 원칙으로 확대 개편)
 - 2025년 6월 3차 개정안 발표(기관의 특성에 따라 4개 혹은 6개 원칙, 4개 혹은 5개의 공시 지침, 2026년 1월 시행)
- 3차 개정, 공시의 품질 개선 및 보고 부담 완화를 통한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
 - 「The UK Stewardship Code 2026」는 효율적인 스튜어드십 이행 및 공시 투명성을 강조, 기관의 특성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부여
 - (스튜어드십 정의 재정립) 경제·사회·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익을 추구에서 고객과 수익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로 수정
 - (유연한 이원화 보고 체계 도입) Policy and Context Disclosure (정책 및 배경 공시)는 4년마다 제출, Activities and Outcomes Report (활동 및 성과 보고서)는 매년 제출로 이원화하여 공시 부담 완화
 - (기관 유형별 원칙 차별화) 자산운용사·자산소유자(6개 원칙)와 의결권 자문사·컨설턴트 등 서비스 제공기관(4개 원칙)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

- 모든 조직은 원칙 1, 2, 및 6을 적용하여 결과를 보고
-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조직은 원칙 3과 4에 대해 보고
- 외부 운용사를 이용하는 조직은 원칙 5에 따라 보고, 원칙 3 및 4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으나,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보고를 권장
- 외부 운용사를 이용하면서 의결권을 가지는 조직은 원칙 4에 따라 보고

○ 스튜어드십 이행 수준을 평가 및 객관적 검증 체계 수립

- FRC는 서명기관(signatories)들의 공시 수준을 평가 및 심사
- 이행점검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정부내부감사국(Government Internal Audit Agency, GIAA)이 정기적인 감사 실시

<The UK Stewardship Code 2026>

For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Disclosures

- A. Organization, investment beliefs and stewardship approach(조직, 투자 신념 및 책임투자 접근 방식)
- B. Governance and resources (거버넌스 및 자원)
- C. Policies, processes and review (정책, 절차 및 검토)
- D. Conflicts of interest (이해 충돌)
- E. Dialogue with clients and/or beneficiaries (고객 및/또는 수혜자와의 대화)

Principles

	Investing directly	Using external managers
1. Integrating stewardship and investment (관리 경영과 투자의 통합)	Required	Required
2. Promoting well-functioning markets (원활하게 기능하는 시장 조성)	Required	Required
3. Engagement (참여)	Required	Optional
4. Exercis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권리와 책임의 행사)	Required	Optional
5. Selection and oversight of managers (관리자 선발 및 감독)	Not Required	Required
6.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업체)	Required	Required

For service providers

Disclosures

- A. Organisation and services (조직 및 서비스)
- B. Governance and resources (거버넌스 및 자원)
- C. Policies, processes and review (정책, 절차 및 검토)
- D. Conflicts of interest (이해 충돌)

Principles	Applied to
1. Communicating with clients (고객과의 소통)	All service providers
2. Proxy advisor services (주주총회 자문 서비스)	Proxy advisors
3. Investment consultant services (투자 컨설팅 서비스)	Investment consultants
4. Engagement provider services (참여 제공자 서비스)	Engagement service providers

출처: Financial Reporting Council (www.frc.org.uk)

■ 일본 FSA (Financial Services Agency)

- 2014년 7개 원칙, 21개 지침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세 차례에 걸쳐 코드 개정 및 고도화 추진
 - 2017년 5월 1차 개정(7개 원칙 30개 지침으로 확대)
 - 2020년 3월 2차 개정(8개 원칙 33개 지침으로 구성)
 - 2025년 6월 3차 개정(8개 원칙 32개 지침으로 구성)
- 2025년 개정은 코드의 간소화와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
 - 코드 수립 단계를 넘어 실행력 제고 단계로 진입
 - 공동 관여(collaborative engagement) 활성화 및 실질 주주(beneficial shareholders)의 투명성 강화
 - 유연성 확보를 위해 Principles-Based approach(원칙중심의 접근), Comply or Explain approach(원칙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하라) 적용

<접근 방식의 변화>

Rule-based approach	Principles-Based approach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세부 지침에 따라 이행	투자자 유형별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수탁자 책임을 이행

- 다만, 규제 완화와 지침 간소화 조치에 비해 기관투자자별 스튜어드십 활동의 객관적인 이행 점검 및 성과평가 체계가 미비한 한계가 존재

■ 한국 금융위원회

-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 2016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민간자율규범으로 도입
 - 2016년 7개의 원칙과 원칙별 안내지침으로 구성된 한국형 코드 제정
 - 2017년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서인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발간
 - 2026년 6월 현재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141개 운용사를 포함, 258개*의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 중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sc.cgs.or.kr)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 원칙1: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의 제정 및 공개
- 원칙2: 이해상충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의 제정 및 공개
-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
- 원칙4: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 및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 원칙5: 의결권 행사 정책 제정·공개 및 의결권 행사내용·사유 공개
- 원칙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
- 원칙7: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출처: cgs.or.kr

- 최초 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 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 및 실질적 이행을 점검할 필요
 -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 점검 절차가 부재
 - 형식적 절차 중심으로 준수, 실질적 이행 성과 미비
 - 체계적 공시 기반이 미비, 코드 참여기관별 성과 비교 가능성 희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추진 사항>

주요내용

수탁자 책임 이행시 고려사항에 ESG요소 강화
(지배구조로 한정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으로 확대 검토)

수탁자 책임 이행 행태 확대
(투자대상 자산에 한정 → 주주활동 관련 일련의 활동으로 확대)

적용대상 투자 범위 확대
(국내 상장주식 → 상장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으로 확대, 해외자산도 포함 검토)

출처: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2025)

- 코드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율적 운영, 중립적 위원회를 통한 이행점검, 사후적 실효성 제고
 -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절차 도입, 이행점검 결과 공시, 그리고 점검 결과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

<코드 이행점검 항목>

1. 수탁자책임 정책 마련·공개

수탁자책임 정책, 비채택원칙 사유, 책임자 및 담당자, 관련 사이트 제시 여부 등

2. 이해상충 관리 정책 마련·공개

이해상충 관리 정책, 주요 이해상충 유형 예시 및 관리·대응방안 여부 등

3. 이해상충 관리 내역 공개

발생한 주요 이해상충 관리내역 여부 등

4. 수탁자책임 이행지침 마련·공개

수탁자책임 이행지침(회사와의 대화, 주기적 점검 포함) 마련 여부 등

5. 주주 관여활동 공개

주요 관심 주제별 관여활동 건수(종합 표로 작성) 및 모범사례 제시여부 등

6. 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 공개

관련 관여활동 건수 및 모범사례 제시 여부 등

7. 의결권 행사 정책 마련·공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권 행사 방법 및 대상회사 제시 여부 등

8.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근거 제시 등

9.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 작성·공개

연 1회 이상 보고서 작성 후 홈페이지 공개 및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 제출

10. 수탁자책임 수행조직 및 인력의 마련·공개

수행 조직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강화방안 마련 여부 등

11. 전문성 확보 노력

이행조직 현황 및 전문성 확보노력 여부 등

12. 위탁운용사 관리(자산소유자의 경우)

선정 절차 및 내역, 사후관리 여부 등

출처: fsc.go.kr

3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및 지침

- 2018년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와 기금의 장기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
 - 7개의 원칙과 제4편 제33조 및 별표로 구성된 지침 마련
 - 별표는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의결권 행사 내용 공시 양식으로 구성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7 원칙>

-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 원칙2:**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 원칙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 원칙5:**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행사내역·사유 공개
- 원칙6:** 수탁자 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편(총칙): 목적, 적용범위, 기본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의사결정 주체 등

제2편(책임투자): 책임투자 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 방식

제3편(주주권행사):

- 의결권 행사 (대상, 행사기준의 기본원칙, 안건별 세부기준, 위임장 제공)
-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비공개대화,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주주제안 등)
-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 준용규정)
- 소송제기(대표소송의 제기, 제소의 결정, 소송 의뢰, 손해보상소송의 제기, 준용규정,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편(공시 및 제출 등): 통보 및 공개, 공시 및 제출, 내부통제, 기록보관, 역량강화, 지침 검토주기

별표: 국내주식·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양식, 중점관리사안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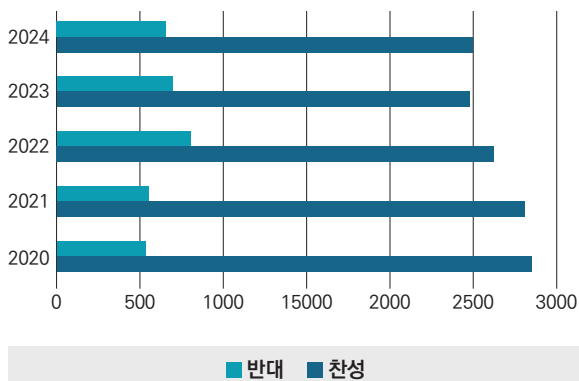
출처: fund.nps.or.kr

■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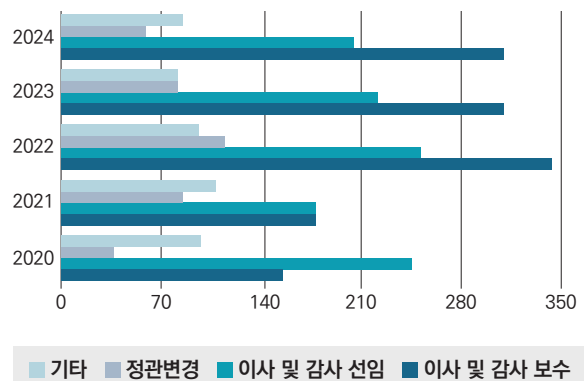
○ 주주권행사는 의결권 행사와 주주 활동으로 구분

- (의결권 행사) 지침 제3편에 기반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의결권을 행사
- (의결권 행사 현황) 2024년 기준으로 찬성률 78.9%, 반대율 20.8%

<의결권 행사 현황>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출처: 2020~2024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 (주주활동)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활동, 적극적 주주활동, 소송제기 등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 선정기준*>

-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신설 2023.3.7.>
-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신설 2023.3.7.>
-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2장 제13조

출처: 2024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 최근 코드의 개정이 국민연금기금에 주는 시사점

- 최근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절차 및 보고의 간소화, 실효성 제고를 강조
 - 한국 금융위원회는 코드의 글로벌 정합성 및 내실화를 위해 개정 추진 중
 - 향후 (개정)한국형 코드와 정합성 점검 및 이행점검 체계 수립 필요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비교>

	한국(예정)	영국	일본
개정시기	추진 중	2025년	2025년
개정목적	코드의 실효성 제고	코드의 실효성 제고, 보고 부담 완화	코드의 실효성 제고, 코드의 간소화
원칙	(현재 7개)	6개	8개
특징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한 원칙중심(principle-based approach)의 규범		
방식	원칙 준수, 예외 설명 (comply or explain)	원칙 적용, 예외 설명 (apply and explain)	원칙 준수, 예외 설명 (comply or explain)
보고서	공시 (단, 영국은 보고서를 이원화하여 보고 부담 완화)		
적용대상	상장주식 외 자산으로 확대		
고려요인	E, S, G (한국과 영국은 최초 G에서 개정을 통해 확대)		
점검대상	자산소유주, 자산운용사, 서비스 제공기관 (단, 한국은 점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이행점검	포함		미포함
이행행태	자산의 배분, 운용 등 주주활동 관련 일련의 활동	주주활동, 의결권 행사, 자산 배분 및 관리·감독	주주활동, 의결권 행사
공동관여	포함 (영국, 일본: collaborative engagement)		

4

맺음말

■ 스튜어드십 코드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형식 준수에서 실질 성과 및 설명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이행 실효성과 설명책임 강화) 적극적인 주주 활동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 창출,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 강조
- (협력적 주주활동) 기관투자자 간의 연대 강화,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공동 대응 체계 마련

■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자본시장 고도화 및 밸류업을 추진 중인 우리 자본시장에 주는 시사점

- 해외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UN PRI의 권고 주목할 필요
 -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5 (KCMC 2025)에서 Nathan Fabian(UN PRI 최고지속가능책임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선진화 강조
- (향후 과제) 한국형 코드의 글로벌 정합성을 위해 규제·의무 중심에서 탈피, 장기 가치 창출 중심으로 재정립 필요
 - (한국 자본시장) 적극적 주주권 활동의 내실화, 협력적 주주활동 기반 조성,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 제고, 기관별 유연성 부여 등

참고문헌

FRC(2025), 「Preparing for the UK Stewardship Code 2026」
 FRC(2026), 「The UK Stewardship Code 2026」
 FSA(2025), 「Revision of the Stewardship Code」
 ICGN(2022), 「ICGN-GISD Model Mandate 2022」
 OECD(2023),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PRI(2022), 「ACTIVE OWNERSHIP 2.0: THE EVOLUTION STEWARDSHIP URGENTRY NEEDS」
 PRI(2022), 「Stewardship」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2020~2024),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2018),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2025),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한국금융위원회(2025),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추진」
 한국금융위원회(2026),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한국ESG기준원(2016),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한국ESG기준원(2017),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연금이슈 & 동향분석(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은

연금제도 및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연구결과 제공을 통해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공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http://institute.nps.or.kr>) - 연구 자료실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한정림

발행처 국민연금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만성동)

Tel 063. 713. 6776

Fax 063. 900. 3250